

국힘 당권주자들 보폭 확대... 한동훈 출마 최대 관심

전당대회 다음달 23일 개최...당원 70%·일반 여론 30% 반영
나경원·윤상현 등 세미나·강연...한동훈 출마따라 경쟁구도 급변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선출 과정이 본격화하면서 잠재적 당권주자들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다. 전당대회는 내달 23일께로 잠정 결정됐고 당 대표 선출방식은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각종 현안에 부쩍 목소리를 높이며 당내 접측면을 넓히고 있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사흘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쌍방울 대복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비판하며 맞상대로서 존재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지난달 해외지구 규제 논쟁부터 지구당 부활론까지 정책·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은 원내·외 인사들과 식사 회동을 이어가고 초선 당선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당내 접점도 넓히고 있다. 전대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5선)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5선)·안철수(4선) 의원 등 수도권 중진들도 유력 후보군이다. 세 사람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의사표명은 삼가고 있지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당

내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원 구성, 복한 도발, 대복송금 의혹 판결 등과 관련해 경쟁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어 당권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나 의원은 각각 인구위기 대응,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책 이슈에 초점을 맞춰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지방을 순회하며 보수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쇄신' 이미지 부각에 힘을 쏟고 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당 밖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학가 강연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함으로써 '비주류 주자'로서 고유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이날도 연세대 행정대학원 특강이 예정돼 있다. 당권주자로 자천타천 거론되는 다른 중진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도 주목된다. 각각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원내대표를 지낸 권영세(5선)·권성동(5선)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참석한 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부를 가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당직자는 11일 당권 경쟁 구도와 관련해 "이번에는 결국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달렸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안 제출

국힘 "중립의무 위반 규탄"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분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결의안을 곧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원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분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로 국회의원 상임

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친정'인 민주당에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연합뉴스

與 "민주, 법사위만 달라는데 일언지하 거절"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놓고 '이재명 방탄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반쪽 국회'로 만들었다"며 "묵과할 수 없는 의회 폭거"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거대 야당의 분탕질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일방 통보한 11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를 모두 양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재명 방탄에 눈먼 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재명 대선용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이

재명 방탄용 원 구성을 밀어붙인 여제는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힐 날"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반쪽 국회'를 만든 민주당과, 중립 의무를 무시한 우원식 '반쪽 의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총선 민심과 국회법이 의회 독재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실 운영 등을 입맛대로 주무르고, 방송을 장악해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치에 대한 기대를 짓밟고, 스스로 의장의 중립적 가치와 위상을 격하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의 태도 역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힘 "국회 보이콧·장의 투쟁" 강경 목소리

'상임위원장' 野 단독 선출

법제사법·운영위 등 사임계 제출
남은 7곳 협상 테이블도 거절
15개 민생현안 특위 활동키로

거대 야당의 사상초유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 오히려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당연히 가져가야 할 상임위원장마저 가져가겠다고 독주한다"며 "야당이니까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원 구성은 향후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야당이 둘러리려 서서 무엇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상임위 불참, 장외 투쟁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부처 장·차관들도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와 분회의를 통과한 모든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정부와 야당이 손을 잡고 야당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구성된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라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떤 법이라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야야 합의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기에 너무나도 다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경론은 현 의회 지형에서 국회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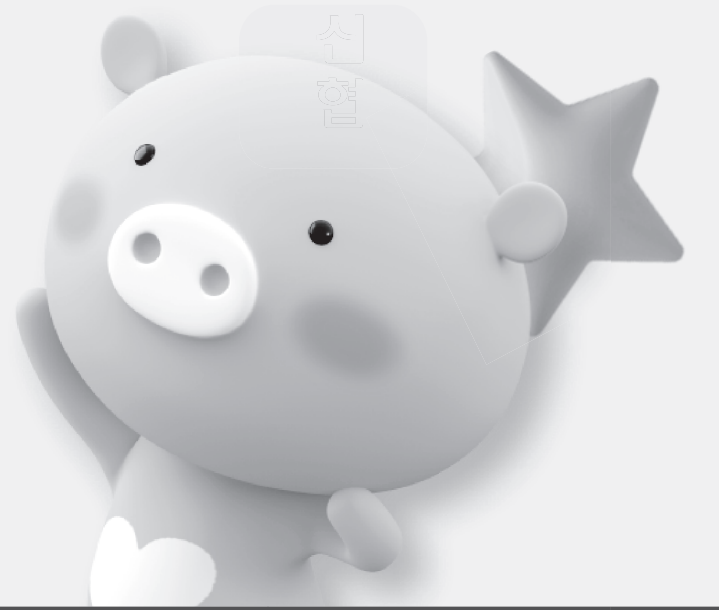
일정에 참여해봐도 둘러리려 설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다만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를 비우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거나 장외로 나갈 경우, 국회에서 집권당의 모습이 사라지는 역설적 상황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당 특위를 통한 시행령 정치도 "야당이 민생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임시방편일 뿐, 상임위처럼 입법 권한이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다. 전날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야당이 상임위에 참석해 야당과 싸우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등원 투쟁론에는 야당과 대치가 길어지면 정부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그 책임은 집권당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깔렸다. 결국 여당 지도부로서는 소수당의 무력감 속에서 탈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한 상태에서 거야의 입법 독주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볼지, 국회를 보이콧하고 의회 독재 프레임에 부각하며 거야 책임론을 부각할지, 그 어느 쪽도 쉽지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